

# 2023년 **황등면** 종합감사 결과 보고

## I 감사개요

- 감 사 기 간 : 2023. 3. 21. ~ 3. 23. (3일간)
- 감 사 범 위 : 2020. 9. 1. ~ 2023. 1. 31.
- 감 사 반 : 감사계장 등 4명
- 감 사 중 점
  - ▶ 예산편성과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 ▶ 사회복지, 산업, 주민자치 분야 등 업무처리 적정 여부
  - ▶ 인감, 주민등록 등 각종 민원처리 적정 여부 등

## II 지적사항

일련 번호	제 목	조 치 사 항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계	12건	시정 4 주의 7 현지조치 1	세입 2 회수 1	훈계 4 주의 3
1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부적정	주의		훈계 4
2	물품 구입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주의		
3	신용카드 연체 등 회계처리 소홀	시정	세입 (○○○)	주의 4 (1번 병합)
4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시정	회수 (▲▲▲)	주의 4 (1번 병합)
5	각종 수당 및 임금 지급 부적정	주의		
6	주민자치 업무 관련 공고 부적정	주의		
7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시정	세입 (○○○)	
8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주의		
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 부적정	주의		
10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시정		주의 3
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업무 소홀	주의		
12	보통예금계좌 관리 업무 소홀	현지조치		

## 1.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급 부적정

- 「익산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지원)의 규정에 따르면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순찰장비 지원 및 순찰차량 유류대, 초소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상해보험 가입비, 범죄예방캠페인 및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는 중앙동 등 29개 읍·면·동에서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피복비, 야식비, 차량유류비를 일반보상금에 예산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음.
- 또한 자율방범대 예산의 투명하고 적절한 회계 집행 관리를 위하여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관련 안내 지침」을 행정지원과-9188(2017.4.1.), 행정지원과-2146(2018.1.22.) 공문을 통해 읍면동에 시달한 바 있으며,
-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 예산 집행 안내 지침」에서는 피복비 지출 확인 서류에 피복지급 대상자 명단(서명) 또는 수령증, 피복사진, 지출 영수증을 첨부 하도록 하였음에도,

▶ 황등면에서는 야간 청소년 선도활동 및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활동 지원 등 지역치안 유지와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운영비를 교부 및 정산 업무를 추진하면서 2020 ~ 2022년도 피복비 지출에 따른 증빙 사진을 2020년, 2021년, 2022년 동일 사진으로 첨부 하였고, 지급대상자 명단이 첨부되지 아니 하였음에도 아무런 지적 없이 정산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음.

## 2. 물품 구입 시 청렴이행서약서 미첨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청렴서약제)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익산시 청렴계약제 운영규정」 제3조(적용범위) 및 제4조(청렴이행서약서 제출)에 따르면 부패없는 투명한 계약행정수행을 위해 익산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200만원 이상의 소액계약에 대하여 “공무원은 계약담당공무원용(별지 제1호서식) 및 사업담당공무원용(별지제2호서식) 청렴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공사·용역·물품구매의 계약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러나 황등면에서는 ‘◇◇◇◇ ◇◇◇◇ 구입’ 등 □건의 물품 업무를 체결 하면서 사업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출 해야할 청렴이행서약서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 신용카드 연체 등 회계처리 소홀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훈령, 2021. 1. 1. 시행)〔별표4〕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에 따르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시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과별 카드 이용 대금 결제 계좌로 입금 조치 하고, 신용카드 사용자는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반드시 관리 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매출전표와

함께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 내역을 검색하여 분임재무관(실·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신용카드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결제일까지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조치 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 세출예산 운영을 위한 일반지침 2. 예산집행의 투명성·책임성 제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집행의 책임성 확보 및 집행과정에서의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하여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을 활용하여 반드시 정당한 승인권자에 의한 결재가 이루어진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소관일상경비 출납원에 대하여 연간 1회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부적정한 예산집행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이 가능한 부분은 시정조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황등면에서는 총 ◆건 지출건에 대해 결제일 내에 정상처리 하였어야 하나 잔액부족으로 최소 2~3일 지연 입금하여 이에 따른 연체료 ●원이 공급으로 지출되었으며, 카드결제 통장에 원인불명 금액 ☆☆☆원을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5.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부적정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7조(실비보상)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 수당은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 「익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지원)에

의하면 익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원 회의 참석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33조에 의하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출원은 지출행위 전에 회계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황등면에서는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장 및 부녀회원에게 참석수당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 5. 각종 수당 및 임금 지급 부적정

-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통·리장은 각 통·리를 대표하며, 읍·면·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음.
-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제7조(실비보상) 규정에 따르면 통·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읍·면·동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월정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9조(보수지급일)에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기간제 근로자 임금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 「익산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5조(임금)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하며,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상황을 확인하여 다음달 5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지급한다고 되어 있음.

▶ 그러나 황등면에서는 최장 6일 이장 월정수당을 지연하여 지급하였으며, 2020년 ▲▲▲▲ ○○ 인부에 대하여 어떠한 근거 없이 계약 종료시 임금 일괄 지급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5개월분 임금을 일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6. 주민자치 업무 관련 공고 부적정

- 「익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수강료)에 따르면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의 이용은 무료로 하되, 위원회는 시장이 별표 1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안에서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수강료를 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조례 제17조(구성 등)에 따르면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황등면에서는 2021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및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입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공고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7. 복지대상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업무 소홀

-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르면 정부양곡을 매입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고,
- ‘2022년 자활사업안내’(보건복지부) 제5장 정부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따르면 신청대상자에게 신청 및 공급기간, 양곡 대금 및 납부방법, 납부 계좌번호, 양곡의 부정유통(판매) 유의사항 등을 포함한 정부양곡할인지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야 하고, 신규 신청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정부양곡 할인 구입 신청서(자활서식 42호, 43호)에 기재토록 하며 성명, 가구원수, 주소, 전화번호, 월별수요량 등이 포함된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별표4]의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에 의하면 보통예금 계좌 개설시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 황등면에서는 2021~2022년 감사 대상기간 중 신규 신청대상자에게 정부양곡신청자 신청안내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정부양곡신청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정부양곡관리 입금 통장에 원인불명 금액 ☆☆☆원을 감사 종료일 현재까지 통장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8. 장애인등급 재판정 업무 소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항에 의하면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장애상태의 확인)에 의하면 시장은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여 장애상태에 맞는 장애등급을 유지하여야 하나, 장애상태에 현저한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장애인의 장애상태를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



- 「2022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등록 담당은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장애인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 「장애인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해당 장애인의 재진단 기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에 받도록 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재진단 기한일 1개월 전에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서」를 통지하고 1개월 이내에 장애진단서 등을 제출 하여야 함을 안내해야 하며, 재판정 촉구 기한 내에도 재판정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 「장애인등록 취소에 대한 사전통지」를 발송하고 2주간의 의견청취를 받고, 의견청취 기간이 지난 후 장애인등록을 취소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인등록을 취소하고 장애인에게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등록증 반환 통보서」를 송달하여 2주간의 기한 내에 장애인등록증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 황등면에서는 장애등급 재판정 기한일이 도래한 ▲명에게 재판정 통보기준일(재판정 기한일 3개월 前)보다 최장 ★일까지 지연하여 안내하였고, 재판정 1개월 전까지 재판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애인등급 재판정 촉구’ 대상자 ◎명에 최소 ☆일에서 최대 ★일까지 지연하여 재판정 촉구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

## 9.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접수처리 부적정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의무와 보호) 제1항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등의 장은 수집 ·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필요로 하는 다른 행정기관등과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행정기관등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행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내용의 정보를 따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법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제1항에 따르면 이용기관이 공동 이용센터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할 때에는 공동이용의 목적,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및 이용범위, 공동이용 대상 이용기관의 명칭을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제1항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기관의 장은 경매참가자, 신용정보업자 및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의 확인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및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지 제15호서식을 제출하여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한 자에게는 해당 물건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와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의 성명과 전입일자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이때, 해당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본인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시 동의서로 갈음), 신용정보업자는 신용정보조사의뢰서 또는 임대차정보조사의뢰서 등을, 금융회사는 담보주택 근저당 설정을 위한 관계서류(금융회사 내부감정평가 의뢰서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또는 대출거래약정서 등)등 전입세대 열람 신청권을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물건지 건당

300원으로 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당해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에 첨부하고 소인(또는 인증기 사용)하여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전입세대 열람 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신청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출받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인의 서명날인 등 위임장의 기재사항을 확인한 후 전입세대 열람 발급을 처리하는 등 민원 접수처리에 신중을 기하여야 했으나,

▶ 황등면에서는 위임장에 위임인이 아닌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 및 도장날인 하여 발급신청한 건에 대하여 보완조치 없이 부적정 발급한 사실이 있음.

## 10.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를 구입하거나 그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의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작업 기계화 촉진으로 농번기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농업기계 구입비용 경감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산물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목록집』(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등록 농업기계 중 500만원 미만의 농업기계 기종에 대해 최대 1,500천원까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1,200여 명의 농업인이 지원을 받았음.
- 한편,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1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 점검하여야 하며,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간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22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지침」(농촌지원과-239, 시행 2022.01.07.)에 따르면 사업대상자의 ‘중소형 농업기계 공급 대장 및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농업기계 구입 확인 및 기계 활용 상태 등을 연도별 사후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 그러나 황등면에서는 2020년 ~ 2022년 중소형농업기계 공급대장 및 관리카드를 미작성하는 등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 사후 관리에 대해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처리 업무 소홀

-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3조(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상) 제2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아야 하며,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제6조(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인)에 따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신청하여야 하며, 시·구·읍·면의 장은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4. 농지

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제9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3항에 따르면 시·구·읍·면의 장은 신청대상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에는 ‘신청대상 농지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임’ 등의 구체적인 미발급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그러나 황등면에서는 상속으로 인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에 대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음을 안내하거나 문서로 미발급 대상임을 통보하지 않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을 받아 발급 처리하는 등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